“롯데, 최순실측 강요로 70억원 더 냈다 돌려 받아”

검찰 K스포츠 강제성 모금 진술 확보

정현식·고영태 등 관련

SK 관계자 “80억원 요구 받아”

‘비선 실세’ 의혹의 당사자 최순실씨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재단 기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강요’로 볼 수 있는 취지의 진술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단 기금 형성 과정 전모와 이를 둘러싼 권력층의 외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최근 롯데그룹 측 고위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내는 과정에 최씨 측의 강요성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은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을 통해 미르에 28억원, 롯데면세점을 통해 K스포츠에 17억원 등 총 45억원을 출연했다. 이후 K스포츠 측은 롯데에 직접 추가 출연을 요청했는데, 이 과정에 롯데 관계자와 만나 일부 관계자들과 사안을 논의했다.

관련 인물들은 재단의 정현식 전 사무총장이나 박모 과장, 최씨 소유 회사 ‘더블루K’의 이사 직함을 가진 최측근 고영태씨였다.

결국, 롯데그룹은 70억원을 더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 5월 송금했다. 이 70억원은 명확히 알 수 없는 이유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롯데 쪽에 반환됐는데, 한 재단 관계자는 이 또한 최씨의 지시였다고 언론에 주장하기도 했다.

해당 시점은 검찰이 롯데그룹 전방위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하기 직전으로, 재단 측이 기업의 약점을 잡아 돈을 ‘뜯어내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그러나 수사가 본격화하자 뒤탈을 우려해 얼른 돌려줬다는 해석도 나온다.

롯데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최씨 측에 거의 강제적으로 기금을 내줬다가 다시 돌려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실상 ‘피해자’와 다름없다는 점을 항변한 것이다. K스포츠재단에서 80억원 출연 요구를 받았던 SK그룹도 대관 담당 전무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SK그룹에 대해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씨 지시를 받아 80억원을 요구했다”는 정현식 전 사무총장의 언론 인터뷰 폭로가 나온 바 있다.

당시 명목은 ‘체육인재 해외 전지훈련 예산 지원’이었지만, 독일에 최씨가 세운 ‘비덱(Widec) 스포츠’가 운영을 맡는 구조였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SK 박모 전무는 검찰 조사에서 80억원 출연 제의를 받은 게 사실이며, SK 측이 거절하고 다른 액수를 제안했으나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최순실 수사 급물살…대통령 수사도 가능할까

불소추 특권 법리 해석에 달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제 최씨의 뒷배경이 된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어 검찰의 행보가 주목된다.

최씨가 받는 10여 가지의 혐의 중 일부에 박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정황이 언론 보도와 검찰 수사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법조계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최씨 의혹에 관여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해 대통령 수사가 불가피해진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최씨가 연설문 등 대외비 자료를 사전 열람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25일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 표현 등을 도움받은 적이 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에는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고 의혹을 일부 시인했다.

이 발언을 토대로 볼 때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연관이 된다는 주장이다.

최씨가 청와대 실세를 동원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거액의 대기업 후원금을 뜯어낸 혐의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들 재단과 관련한 의혹을 해명하며 “지난 2월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들을 모신 자리에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실현을 통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기업인들의 문화 체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부탁드린 바 있다”고 했다. 재단에 대한 후원을 독려했다고 인정한 셈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도움이나 후광이 없었다면 최씨가 이번에 제기된 수많은 의혹 행위 중 단 하나라도 실현할 수 있었겠느냐”고 주장했다.

다만,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을 놓고 수사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점이 문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대해 법조계에선 ‘기소는 물론 수사도 금지한 것’이라는 해석과 ‘기소만 못 하도록 했을 뿐 수사는 가능하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국정은 ‘혼돈’ 청와대는 ‘고요’ 국정을 혼돈 속으로 몰아넣은 비선 실세 의혹의 장본인 최순실 씨가 검찰에 출석한 지난 31일 밤 청와대는 고요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청와대 직원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최씨가 출석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한숨과 우려의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안종범·우병우·정호성 청와대 핵심 비서관 속속 검찰로

차은택 광고 싹쓸이 의혹도 수사

‘비선 실세’ 최순실씨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그와 직간접으로 연루 의혹을 받았던 청와대 전 실세 비서관들도 속속 검찰에 불려나가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최씨를 긴급체포하면서 향후 수사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향해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이 청와대와 연관됐다는 의혹을 풀 핵심 인물로 꼽힌다.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이 국내 대기업들에 80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모금하는 과정과 운영 전반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기업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다는 점에서 ‘강제모금’의 배후로 의심받는다. 안 전 수석은 최씨의 개인회사인 더블루케이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만나는 등 최씨를 도왔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안 전 수석은 “전혀 모른다”고 해명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가족회사 ‘정강’ 공금 유용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이르면 이번 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재직 때 ‘특수통 칼잡이’로 이름을 떨치던 우 전 수석은 2013년 4월 조직을 떠난 뒤 3년 7개월 만에 조사를 받는 신분으로 ‘친정’에 다시 나오게 됐다.

우 전 수석은 처가 가족회사 ‘정강’의 접대비와 통신비, 회사 명의로 빌린 고급 외제 승용차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 전 수석은 또 아내가 화성땅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긴 채 공직자 재산신고를 허위로 하고 의경에 복무 중인 아들이 보직 특혜를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주식 대박’ 사건의 장본인인 진경준 전 검사장의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은 개인적으로 최순실씨에게 이메일을 보냈는지에 대해 조사받게 된다. 정 전 비서관은 자신 아이디의 이메일로 최 씨에게 대통령 문건이 유출됐다는 의혹에 제기돼 대통령 연설문과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또 검찰은 최순실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사 ‘아프리카픽쳐스’를 통해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차씨 회사인 ‘엔박스에디트’, 차씨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광고기획사 ‘플레이그라운드’도 차씨를 등에 업고 대기업·공공기관 광고를 쓸어 담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업계에 따르면 KT가 올해 2~9월 내보낸 영상광고 24건 중 6건을 아프리카픽쳐스가 수주했었다. /연합뉴스

최순실 청와대 프리패스

행정관 차 타고 수시로 출입

얼굴 대조 등 절차 없이 통과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이영선 청와대 부속실 행정관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청와대를 수시로 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일 ‘한겨레’에 따르면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최순실씨는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 초부터 최근까지 이 행정관이 운전하는 차량의 뒷좌석에 앉아 검문·검색을 받지 않은 채 청와대 정문을 통과해 경내에 드나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신문은 청와대 관계자가 “이 행정관은 청와대 소유의 차량을 몰고 최순실씨의 집이나 사무실 등으로 가서 최씨를 태우고 청와대로 들어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또 최씨의 방문 횟수와 관련, “최씨의 출입 빈도가 셀 수 없을 만큼 잦았던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행정관은 최씨가 강남의 비밀 의상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옷을 고를 때 휴대전화를 자신의 셔츠에 닦아 건넨 인물이다.

이 신문은 다른 관계자도 “최씨가 드나들었던 문은 경호실 직원들 사이에서는 11문으로 불리는 곳으로, 청와대 일반 방문객이 드나드는 동쪽의 연풍문이나 서쪽의 시화문이 아닌 정문”이라며 “정문은 국무회의 때 장관급 이상이 출입하는 곳이다. 장관들도 출입증을 보이고 얼굴 대조를 거쳐 통과가 허용된다. 그런데 최씨는 이런 출입증도 없이 프리패스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근까지 청와대 정문 경비를 맡았던 경찰관 A씨도 이날 청와대 부속실 행정관이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 사람이 탔을 때 “VIP 손님이다”고 말하면 탑승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통과시켜줬다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